지식경제부 보도자료	"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, 2012 서울 핵안보정상회의"
초일류 글로벌 특허청, 지식재산 부국을 선도합니다 보도자료	http//www.kipo.go.kr

2012년 3월 12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팀 윤종욱 팀장(02-2110-5581), 이제오 사무관(02-2110-5609)
- 특허청 정보기획과 최종인 과장(042-481-5128), 송광렬 사무관(042-481-5128)

벤처기업에 대한 특허침해, 대기업보다 9배나 많아

-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·특허청과 공동 조사 -

□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대기업에 비하여 특허권 침해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.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(위원장 현정택)와 특허청(청장 이수원)이 공동으로 실시한 "2011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" 결과에 의하면, 2010년 한 해 동안 조사대상 대기업의 0.7%가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 반면,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2.4%, 6.5%로 나타나, 대기업에 비해 3.4~9.3배나 더 특허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* 산업재산권 :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

○ 한편, 상표권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 조사대상 대기업의 1.7%, 벤처기업의 0.5%가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,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2.2%로 나타남에 따라 대기업이나 일반 중소기업이 벤처기업에 비해 3~5배나 더 상표권 침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□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최근 5년간('06~'10년) 산업재산권을 등록하고 최근 2년간('08~'10년) 산업재산권을 출원한 17,2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얻은 것이다. 무역위원회는 매년 지식재산권 피·침해 분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 오고 있으며, 지식재산의 창출, 보호 및 활용 등에 대하여는 지난해부터는 특허청과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.

□ 금번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결과에는 이 외에도 지식재산 담당조직 및 인력 등 인프라 현황, 특허정보 활용현황, 특허권 등 도입현황, 연구개발 성과물의 보호전략, 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이전 현황, 지식재산의 침해 등 기업, 대학·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활동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도 수록되어 있다. 본 보고서는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 홈페이지 (http://www.ktc.go.kr)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(http://www.kipo.go.kr)에서 다운받아 볼 수 있다.

□ 붙임: 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

붙임 **2011년 지식재산권 침해 실태조사 결과**

1. 실태조사 개요

❑ 추진배경

○ 국내 **지식재산권 침해현황 파악** 및 **정책추진을 위한 통계자료**로 활용하기 위해 **'08년부터** 매년 실태조사 추진

* '11년부터 특허청과 공동으로 지재권 침해실태조사 실시

- **지재권보호 관련 통계** 확보, 침해사례 및 업체대응실태 파악, 향후 정부차원의 지재권 보호대책 마련 등

❑ 조사 개요

○ 조사내용 : **'11년 국내기업의 지재권**(산업재산권*) **침해피해 현황, 대응 실태** 등

* 특허권, 실용신안권, 상표(브랜드)권, 디자인(의장)권

○ 조사대상(모집단) : '11년을 기준으로 기준연도**(출원 '08년~'09년, 등록 '06~'10년)**에 **산업재산권을 2건 이상 출원하고, 1건 이상 등록한** 국내 **17,220개** 기업

○ 표본구성 :전체 표본 수: 3,673개 기업

- 기준연도에 출원 20건 이상 또는 등록 100건 이상을 한 기업 및 출원 20건 미만, 등록 100건 미만을 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할당추출(quota sampling)

※표본 할당비율은 기업의 경우 평균 12%

○ 조사방법 : 설문지 우편발송 후 방문 회수, 피해기업 중 정도가 심한 **기업은 직접 방문하여 심층 인터뷰**

○ 조사결과 : 총 3,673개(기업:3,673개 중 1,099개 기업이 응답)

- 설문응답률은 39.2%, **표본오차는 ±1.43%로 95% 신뢰수준**

○ 모수추정 : 3,673개 기업을 표본 조사하여 수집된 결과를 바탕으로 모수 추정(parameter estimates)

2. 실태조사 결과 주요내용

○ 응답기업(1,099개) 중 100개(9.1%) **기업이 542건**(업체당 5.4건)**의 피해**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, 이를 모집단 전체(17,220개)로 환산하면 **1,137개 기업**(6.6%)**이 6,137건의 피해**를 입은 것으로 추정됨

❑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 현황

○ **[총괄]** 모집단에 속한 기업 중, **1,137개 기업**(6.6%)**이** '10년 한 해 동안 총 6,137**건**(업체당 5.4건)의 **지재권 침해 피해**를 입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됨

○ **[유형별]** '10년 한 해 동안 특허권 침해를 받은 기업은 전체의 4.0%(업체당2.6건)로 가장 높았고, 이밖에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권 침해를 받은 기업의 비율은 각각 0.9%(업체당 2.1건), 1.4%(업체당 4.2건), 2.3%(업체당 3.0건)로 조사됨

○ **[기업규모별]** 특허권 침해를 받은 비율은 대기업 0.7%, 일반 중소기업 2.4%, 벤처기업 6.5%로 벤처기업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상표권의 경우는 대기업과 일반 중소기업이 각각 1.7%와 2.2%로 벤처기업 0.5%보다 그 비율이 높음

○ **[업종별]** 전체 침해사례 중 특허권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건설업으로 전체의 68.4%를 차지함

- 실용신안권, 상표권,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은 각각 인쇄/종이/출판(20.0%), 사업서비스/통신업(100%), 농림수산/광업/음식료/담배제조업(100%), 건설업(12.9%)로 나타남

○ **[침해물품의 제조자 및 제조지역]** 전체 피해사례 중 68.8%는 국내기업이고, 해외기업과 개인인 경우는 각각 19.2%와 1.8%로 조사됨

- 침해제품 제조지역이 국내인 경우는 전체의 74.8%로 가장 높고, 중국 및 일본인 경우도 각각 14.5%와 2.7%로 나타남

○ **[침해물품 유통지역]** 전체 피해사례 중 82.1%는 침해제품의 유통지역이 국내이고, 중국과 미국인 비중도 각각 12.2%와 2.9%임

❑ 지재권 침해로 인한 피해규모 및 대응비용

○ '10년 한 해 동안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인정받거나 당사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진 비율은 25.8%

- 침해제품이 시장에 유통됨으로써 영업상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한 비율은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은 기업 중 52.5%

- 영업상의 피해는 없었지만 향후 기대수익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응답한 경우는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기업의 63.4%

○ 모집단에 속한 기업의 '10년 전체 지식재산권 침해 피해 규모는 1,506개 기업, 1조4천393억원으로 조사됨

전체 침해피해 규모 추정 (단위: 개, 억원)

구 분	기업 수	피해금액(2010년) (억원)	
		합계	피해 기업 평균
손해배상액(화해금)	256	2,364	9.2
실현된 피해금액	560	5,066	9.0
기대수익의 손실금	690	6,963	10.1

❑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 현황

○ 기업들은 지재권 침해에 대해 '경고장 발송'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음

- 다만, 침해제품이 해외에서 제조되었을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된 경우보다 민·형사 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신청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침해피해 대응활동		대응하는 비율	대응한다고 응답한 기업에서의 비율		
			행정기관에 단속 및 조사 요청	민·형사소송 등 사법적 구제절차 신청	경고, 합의시도 등 자체 처리
침해 유형	해외제조, 해외판매	54.5%	2.6%	35.1%	62.3%
	국내제조, 해외판매	69.2%	22.8%	22.6%	54.6%
	해외제조, 국내판매	67.6%	2.7%	31.5%	65.7%
	국내제조 국내판매	84.2%	7.8%	15.8%	76.4%

❑ 지재권 침해피해 대응의 애로사항과 정책요구

○ 지재권 침해 시 대응의 애로사항으로 '대응 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'를 꼽은 기업은 전체의 71.0%로 가장 높음

○ 지재권 침해에 대응하는 **정부정책으로 '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을 위한 소송 등 비용지원'**(72.9%)을 **가장 많이 요구**하였음

지식재산권 침해대응을 위해 필요한 정책(단위: %)

정책적 요구사항	실효성있는 행정적·사법적 처벌조치강화	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범위확대 등	지재권 보호 및 대응을 위한 정보 제공강화	행정기관의 단속권한 강화	지재권 신고 포상금액 증액	침해 대응을 위한 비용지원
전 체	71.9	71.2	70.2	67.1	53.7	72.9
대기업	68.5	68.2	76.7	64.6	47.8	69.9
중소기업	68.9	66.7	67.0	64.8	53.6	70.6
벤처기업	76.2	77.1	72.4	70.4	55.2	76.2